

부산시, 올해 '19.2만개 일자리 창출·고용률 67%' 목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총 2조1000억 예산 투입
지역 특화 일자리 등 강화



부산시청.

부산시는 1일 '2025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15~64세) 67.1%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계획은 '민선8기 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토대로 최근 고용시장 변화를 반영해 수립됐으며, 청년 고용률(15~29세) 46.3%, 여성고용률(15~64세) 59.0%, 상용근로자수 94만 명 등 세부 목표도 함께 내놨다.

특히 올해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개 이상으로 잡아 지역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시

민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 ▲대상별 맞춤형 일

자리 창출 등 4대 전략 16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전시 복합산업(마이스)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 고용서비스 기능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한다. 중년층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50 채용 촉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고용 전환 촉진 패키지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과 디지털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반도체, 신소재, 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계부품, 신발·섬유, 조선·기자재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도 집중한다.

'미래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를 본격 가동해 지역기업과 대학의 혁신을 지원

한다. 또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해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 기회발전특구 조성, 한국산업은행 이전,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지속해서 힘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가칭)를 새롭게 조성해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여성·장노년·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박형준 시장은 "2025년 부산시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활성화와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을 지원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디지털·친환경 등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덕군

각계각층서 산불피해 성금 기탁

경북 의성군에서 확산한 산불로 최악의 피해를 본 영덕군에 각계각층의 성금 기탁이 이어져 재기의 희망을 싣고 있다.

지역 출신의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 영덕군을 찾아 성금 5000만 원을, 역시 지역 출신 사업가 신영덕풍력발전·화남그룹의 박봉용 대표가 1일 5000만 원을 기부했다.

1일 현재 영덕군에 기부된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영덕복지재단을 통한 일반기부가 156건 3억 6557만여 원,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1만2034건 12억 3606만여 원으로 총 1만2190건에 16억여 원이 모였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사업 선정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됐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 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관광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하여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 보전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 선정되면서 지방비 5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양산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양산시는 경남도가 진행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정 운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상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지방세 조사·심사,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정 일반 등 7개 분야 22개 항목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울산대교 통행료 1년간 동결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통행료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합의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통행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가 114.91로 지난 2023년(112.71) 대비 2.20(1.95%) 상승함에 따라 대형차와 터널 구간 중형차 통행료의 인상 요인(100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구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전남도, 日서 20만弗 규모 수출계약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참가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전남도

전라남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하고, 6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기존 도쿄에서 열리던 소비재전을 오사카에서 특별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지역 기업은 화장품, 식품, 유기질 비료, 수산물 등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집중 전시하며 현지 바이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안도

초도의 천일염에 다양한 맛을 더한 프리미엄 소금을 출품한(㈜해여름은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참가기업 10개 사는 일본 94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며 총 67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도, 산불 이재민 심리안정 집중 지원

긴급 심리지원 핫라인도 운영

경북도가 대형산불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집중 지원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발생 다음날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주민지원에 나섰다.

지금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국가, 영남권, 강원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적십자사), 전라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재단심리지원단 등 여러 기관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주민에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전문가의 개인 및 집단 상담, 산책 등을 독려하며 회복을 지원

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집이 전소돼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나이 및 상황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피해지역이 넓고, 대피소도 줄어들어 따라 긴급 심리지원 핫라인(1577-0199)을 운영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하는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많은 주민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어, 각 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환 기자 kih9@

경주시, 신산업 통해 지역기업 돌파구 마련

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완화
첨단장비 무상지원 확대

경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 신산업 지원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올해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고,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첨단장비 무상지원 확대에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업지원 프로그램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은 ▲지역특화 신산업 전환 촉진 기업지원(4억4000만 원)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3억 원) ▲기술닥터 119 지원(1억 원) ▲e모빌리티 전기 구동계 부품산업 기술 혁신(3억 원) 등 4개 사업으로 경주시 주최, 해당 기관이 주관한다.

시는 향후 기업지원 자부담 비율 완화 사업 대상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이어 외동에 소재한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보유 첨단장비에 대해 지역 기업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에는 첨단소재 복합환경 내구 시험기, 고온저온 고소피로 시험기 등 시험평가 장비 8종이 있다.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에는 탄소소재 재생산을 위한 시생산 장비 6종, 분석장비 8종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리 허브센터에는 배터리 충전 성능 평가장비, 빅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분석 시스템 등 5종이 구축돼 있으며, 올해 안으로 배터리 진동·충격 시험기, 배터리 낙하식 충격 시험기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소 912곳서 진행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시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1일 밝혔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인 2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

한 신분증으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특집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